2015년까지 온실가스 70만7천t 감축

광주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광주시가 2015년까지 온실가스 70만7천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 산업, 농업 등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계획과 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녹색생활 실천 등 3대 분야 9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생태 숲 조성, 수목원, 학교 운동장 녹화 등을 통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녹지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시는 광주에 조성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시설과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물 등에도 친환경적 설계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도 2006년 2.02%에서 2015년에는 5%까지 확대하고 용두주공아파트와 효천 택지지구 등에 '그린홈'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을 토대로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도록 광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린 IT 시범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수도 광주가 미래성장을 기약하는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은 물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공예품 공모전 유명무실…상품화 '0'"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

광주시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해마다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나 수상작들의 상품화 사례는 전무해 공모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자 의원(민주·비례대표)은 18일 "광주를 대표할만한 관광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도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이미지를 담은 관광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해 해마다 10편 가량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도 5천720만원을 들여 전국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 12개 작품 선정해 관광상품화 개발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12회째를 맞도록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수상작들이 실제 상품화된 사례는 없어 공모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신있게 내세울 대표 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관광상품화를 위한 용역 예산을 편성해 광주를 대표할 만한 상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친자 논란' 이만의 장관

"부적절 처신 죄송"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8일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해명 요구에 대해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면서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FTA 조속 비준' 공감대 재확인

오바마 방한…오늘 李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 등 논의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최대 경제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미국 내에 의료개혁, 실업사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의회의 분위기도 크게 바뀌지 않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FTA 문제에 돌파구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밖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공조 방안과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와 한국의 역할 및 기후변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는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비준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FTA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미국이 내부적으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10%가 넘는 실업사태에 직면해 있어 특별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최근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의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못박는 정도의 진전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양국 정상의 구두 메시지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지고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비준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어 미국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재계와 일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해 구두 메시지 이상의 진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탈출 방안과 주요 20개국의 부상 등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당분간 확장적 재정운용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출구전략 또한 국제적 공조 하에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시아 순방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에어포스 원을 타고 도착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활빈단, 오바마 대통령에 '완도 전복' 선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완도산 전복을 이명박 대통령과 18일 방한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먹을 수 있도록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급 택배로 보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한·미 정상이 영양가 높은 강장제인 완도산 왕 전복과 2012년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 돌산 갓김치를 먹고 힘을 모아 북핵을 저지하고, 한국전쟁 때 도와준 혈맹 우방 국가 원수에 대한 보은(報恩)의 선물로 특산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활빈단은 이어 "보성 특산품인 보성녹차유(油) 특제품에다 한·미 정상 간 '찰떡공조'가 이뤄지도록 찰떡세트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 정상회담 중이나 오찬, 만찬 때 오바마 대통령이 맛보도록 청와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현장과 시각

세종시, 형평 어긋나면 안된다

최 권 일
사회2부 기자

전국이 연일 '세종시'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기업중심 도시로 변경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엊그제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이 세종시로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새어 나오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느라 한바탕 소동도 빚어졌다.

한전 측과 정부 측이 예정대로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처럼 현 정부의 정책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게 사실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무안기업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더욱더 조바심이 크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 문제는 정부와 이전기관들의 어설픈 태도 때문에 더욱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된 약속에도 지역민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에 보인 태도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비협조적' 이전 움직임에 사실상 방관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경 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 슬금슬금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도 문제지만, 정부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세종시 특혜'가 가장 큰 문제다.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세종시 세일즈'는 기업유치와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전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눈물겨운 노력 끝에 중국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사시켰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남도의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6년 가까이 노력해 국내·외 투자기업들을 모아놓았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농식품부의 간척지 '알 박기'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혜택을 앞세워 세종시 끌어안기에 나선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 광주·전남은 기업유치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한 지역에 '올인'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근간을 스스로 흔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차질없는 혁신도시 추진 의지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수정·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cki@kwangju.co.kr